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¹⁾

이 건 범

최근의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특징은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가문 중심의 강력한 통제권이 행사되고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특징이 향후 50년, 100년 후에도 과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대중소기업간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승계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총수일가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주로 기업집단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재벌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산과 매출액을 GDP와 비교할 때 2004년 대규모기업집단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은 GDP 대비 각각 0.84, 0.63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각각 1.37, 1.01배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라서 지정 집단이 변화하고 또 기업집단의 구성 회사에도 변동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군의 생산주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으며 또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1) 이 글은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어 단행본 『한국형 시장 경제체제』(2014년, 이영훈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제2장을 저자가 요약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기업집단의 생산시장 내 위상을 보다 엄밀히 측정하기 위하여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에 있어서 대규모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전체 광공업 및 제조업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수와 영위업종에 있어서도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수가 크게 늘어나고 영위업종수가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열사 확대와 다각화 전략은 모든 규모의 기업집단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10대 재벌의 경우 2001년 평균 17.1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년 56.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어 계열사수가 3.3배 확대되었다. 동기간 영위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기준 10.1개에서 41.7개로 4.1배 증가하여 다각화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해 있고 그 산업 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하여 높다는 것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독과점의 폐해와는 달리 기업집단이라는 조직적 특성을 이용해 거래상의 경쟁을 제한하여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이다. 계열사의 지분이 높거나 총수나 동일인 2세의 지분이 많은 회사의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총수 가문의 사적이익을 위한 터널링(tunnelling)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이외의 혁신적인 기업의 등장을 불가능하게 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역량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한다.

상위 기업집단의 규모가 후발 산업화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큰 한국의 가문중심 기업집단은 소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문의 소유지분이 낮고 예외 없이 지배가문이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권과 현금흐름권의 괴리도가 높으며 두 가지 대리인 비용(경영자와 주주 간 대리인 비용,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 대리인 비용)이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유래 없이 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상위 대기업은 공기업을 제외할 경우 모두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독립계(stand alone)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국의 상위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구성원리가 ‘기업집단’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구조 형태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문의 경영참여와 특히 예외 없는 경영권 세습은 선진국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CEO 위협의 현재화 가능성 그리고 가문 내 다툼이 (비중이 큰 그룹에 영향을 미쳐) 경제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경우에도 기업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집단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소유분산형태를 보이는 국가도 있고, 기업부문에서 가족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상위기업들이 대부분 기업집단 소속이고, 소유지배가 지배소수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족경영이 지배적인 경영형태를 취하는 나라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소유 분산 확산과 전문경영인 주도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미흡하였고 주주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대항 세력이 성숙하지 않았던 것에도 이유가 있다. 즉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독점대기업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정치세력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감독이사제도를 관철시키는 강력한 노동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영국에서와 같이 모든 주주에 대해 평등한 주주권 보호를 추진할 기관투자가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 산업부문과의 이해상충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금융부문의 발전이 지체된 것도 거대 기업집단 지속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유일한 견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부문도 규제완화와 자유화의 영향으로 규제역량이 약화되고 오히려 국가와 거대기업집단의 유착이 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집단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가족기업에서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된 자본주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배적인 형태인 가문중심 기업집단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이룰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즉 한국과 같이 가문중심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배적인 기업형태이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의 반트러스트 운동, 영국에서의 독립적인 금융자본의 발달, “자이바츠(財閥)”를 해체하면서 가문을 배제한 전후 일본의 미군정조치 등과 같이 강력한 대항 운동세력이 한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한국에서 급격하게 소유의 분산을 기대하거나 지배가족의 소유와 경영을 기업집단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향후 소유, 지배구조를 전망할 때 영미식의 분산된 소유구조하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유럽대륙 국가의 내부자 모형(internal control)이나 일본의 “게이레츠(系列)” 형태의 기업집단으로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를 거친 후 영미식의 소유/지배구조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변화가 경제적인 위기, 반 기업집단 정서에 기반을 둔 규제환경의 급변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촉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가문 중심 기업집단이 그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기업집단의 경제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집단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적인 환경이 존재할 때 성장하는 기업 역시 기존의 지배적인 기업형태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의 총수 없는 기업집단의 경영행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비연관 다각화와 계열사 확대라는 기존 가문 중심 기업집단의 경영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이라고 하는 경영행태가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자본시장, 노동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한 사업기회제공 관행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경영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기업경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배주주, 즉 총수일가를 이루는 지배소수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의 권위와 힘은 앞서 살펴본 통제권 확대 메커니즘(CEM)에 의존한다. 즉 소유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통제권과 현금흐름권의 격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 기업집단 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유인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의 그룹소유관계하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 기업 간 배당소득세제의 실질화, 경쟁 제한적 주식소유에 대한 경쟁당국의 처분권 강화 등 법인 간 주식소유의 비용을 제고하는 정책은 기업집단 형성의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낮은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상호 주식보유(상호출자)나 피라미드형태의 주식 보유를 통하여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현재 형태의 기업집단 유지의 유인을 줄일 것이다.

한편 가족 경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배가문이 용이하게 소유와 경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1935년 계열사 청산에 따른 자본이득세 면세 조항을 만들어 지주회사의 하위 자회사에 대한 청산을 유인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체를 촉진하는 당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 통제권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지속된다면 지배가문의 질서정연한 퇴출(orderly exit)과 기업집단 체제의 완화는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집단의 변화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제약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기업집단 자체의 변화 가능성 및 지배가문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 가능성, 그리고 개방과 경쟁 확대의 정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의 가능성, 산업자본과 독립적인 금융부문의 독립적 발전 가능성과 노조 등 대항세력의 형성 가능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가 변화될 것인가가 보다 근본적인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에 따르는 편익보다 지배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규모 확대 및 CEM 활용의 유인이 증대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유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기업집단체제는 언제라도 재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제권 확대 메커니즘(CEM)을 항구화하는 지주회사제도 권장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복잡한 출자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 유지요건 주식보유율이 하락하면서 통제권과 현금흐름권의 괴리를 항구화하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현금흐름권/지배권 괴리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여지가 없는 신규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전화번호: (031) 379-0576

팩스: (031) 372-3343

Email: kblee@hs.ac.kr